

사회변혁기 북한지식인의 역할과 정치의식*

북한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1998~2008)

전미영(동국대 강사)

국문요약

체제전환기 민주화, 자유화를 선도하고 의식개혁을 주도했던 동유럽지식인들과는 차원을 달리하지만, 북한의 지식인들 역시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우선적 과제로 한 체제내적 개혁을 수행해나가는데 주력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사회변혁기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경제성장과 '김일성사회주의체제'의 유지라는 양대 목표를 성취해나가기 위해 북한 지식인은 자본주의 문화침투에 대응해야할 체제의 이데올로그로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할 선진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북한의 지식인은 체제 전복세력이 아닌, 사회변화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개혁을 추동해가는 친(親)체제적 개혁세력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가는 세계사적 변화 국면은 북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북한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북한, 지식인, 지식인역할, 정치의식, 세계화인식, 개혁개방, 김정일체제, 북한사회변화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연구경비에서 지원되는 통일학·평화학 연구사업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1. 문제제기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세계인들은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지켜보아야 했다. 1989년부터 1994년의 기간에 소련 및 동유럽의 26개 국가가 붕괴하거나 사회주의를 포기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로 체제로 이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한 채 개혁·개방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28일 북한은 당대표자대회를 통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아들을 후계자로 공식화함으로써 현대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권력의 3대 세습을 현실화 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심각한 경제위기 등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당이 선택한 생존전략은 경제분야에서의 부분적 개혁과 정치, 군사분야에서의 사회주의적 통제력의 강화라는 이중전략이었다. 이러한 이중전략은 2002년 단행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1995년 태동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사회의 통치방식으로 일반화된 선군정치로 구체화되었다. 경제회생을 위해 필요한 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시장경제의 확산이 가져올 자유화 현상을 군사 우위의 전략으로 관리해나가고자 하는, 다분히 체제유지를 우선으로 한 제한적 개혁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구 및 소련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사회주의 체제 변혁기 지식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물론 개별 국가에 따라 사회변혁세력으로서의

지식인 역할에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사회변혁세력으로서의 지식인의 선도적 역할이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체제변혁기 지식인들의 반체제운동과 자유주의 사상전파자로서의 역할은 체제전환과정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20세기 말 개혁개방정책으로 냉전의 종식을 이끈 고르바초프의 '신사고'(new thinking)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소련의 경제위기, 국제관계의 변화 등 정치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혁신적인 리더십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 지식인 그룹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 구소련에서 개혁적인 지식인의 태동은 1960년대 후르시초프에 의해 추진되었던 평화공존적 사고 변화의 시기에서 출발한다. 평화공존노선은 정치적으로는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 짧은 해빙의 시기동안 소련의 학계에서는 비판정신을 갖춘 새로운 지식인그룹이 출현하게 된다. 이후 이들은 공산당 내부에서 개혁적 지식인 소그룹을 형성하며 신사고를 발전시켜갔으며, 이 지식인들의 지적 영향을 받은 혁신적 지도자 고르바초프에 의해 개혁, 개방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²⁾

그렇다면 과거 소련 및 동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재 북한사회에서도 개혁적 지식인의 혁신적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과연 과거 소련 및 동유럽 지식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사회변화를 이끌 추동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의 지식인들은 어떤 사회변화를

1) Robert D. English, *Russia and the Idea of the West: Gorbachev, Intellectuals & The End of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p. 2.

2) 이에 대해 Robert D. English는 1960년대 개혁적 지식인의 움직임은 여전히 초보적이었으며, 학계 및 문화계의 위계질서가 구세대에 의해 지배되고 보수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곧 해빙이 전복되었지만, 정치적 억압이 다양한 비판정신을 갖춘 새로운 엘리트의 출현을 막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Ibid.*, pp. 50-51.

준비하고 있을까? 그들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체제변혁기 북한 지식인의 사회변혁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북한지식인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역사적 검토이다. 구소련의 경우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개혁적 지식인의 출현이란 시대적 상황변화에 의해 단기간에 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는 지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역사적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북한 지식인들의 정치의식, 특히 세계변화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식인들의 발언은 공동체의 세계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진보적 사상의 수혈자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사회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특히 공식담론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북한지식인의 발언은 북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체제 내적 개혁의 담론을 생산해내는 이데올로그이자 실천가인 지식인들의 정치의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및 세계화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지식인의 정치의식에 접근하고자 한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개혁·개방 및 세계화의 압력과 강고한 권력을 기반으로 한 체제유지의 원심력이 충돌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세계화'에 관한 북한 지식인의 인식을 파악하는 일은 체제변혁기 북한사회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범위

지금까지 북한 지식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지식인들에 대한 숙청과 정치화를 통한 지식인사회의 소멸을 전제로 한 선험적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즉 권력엘리트의 지식인정책에 의한 북한지식인들의 체제도구화라는 예측 가능한 분석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정치’를 지배체제 유지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해 왔던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사회에서 정치이념을 이론화하고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최근 북한당국이 지식인들의 체제이반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지식인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지식인들의 진술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정치의식 및 현실인식을 규명함으로써 북한지식인들의 세계관 및 사유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과연 북한지식인들은 탈냉전, 전지구화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북한 지식인들의 발언 및 기초문헌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혁·개방기 북한 지식인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정치의식은 정치문화 중 주로 정치적 신념, 태도, 판단, 감정 등 국민들의 가치체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정치적 행동에 매개 역할을 한다. 정치의식은 학자간의 합의를 이룬 학술적 개념이기보다는 많은 잔여적 의미를 갖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의식의 연구 범위는 매우 넓어서 한 국가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과 변수를 선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³⁾ 본 논문에서는 개혁, 개방과 체제유지라는 이중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 북한사

3) 엄구호, “후기공산주의 러시아인의 정치의식: 전통주의와 자유주의,” 『중소연구』 통권 95호 (2002), p. 141.

회의 체제변화 의지와 지향점을 이해하기 위해 민주주의관과 세계화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지식인의 정치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정치의식 분석은 정치문화 중 가치체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정치의식 분석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조사방법(survey methods), 내용분석법(content-analysis), 집중인터뷰(depth interview) 등을 들 수 있다.⁴⁾ 내용분석은 서베이조사나 심층면접에서 행하는 것보다 그 직접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연구의 경우, 다양한 문헌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은 정치의식을 연구하는데 유익한 수단이 되고 있다.⁵⁾

본 연구가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한지역에 대한 서베이 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연구의 한계에 기인한다. 물론 최근 한국에 정착한 북이탈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북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북한사회의 세계관 및 가치관 형성을 주도해나가는 지식엘리트들의 사유 방식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현재 북한 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학자들의 학술논문에 보다 주목하고자 하며, 탈북지식인들의 증언 자료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북한의 대표

4) D. Kavanagh, 정재욱 역, 『정치문화론』 (도서출판 이진, 1989), p. 84.

5) 리처드 페이전(Richard Fagen)은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권력을 잡은 이후, 서베이 방법을 시행할 수 없자, 혁명형의회와 혁명교육전수학교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정치의식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나단 라이츠는 정치엘리트에 대한 연구의 경우, 각종 연설문이나 기록물 같은 유형의 자료들이 풍부한 편이므로 내용분석방법은 지도자집단의 가치체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익한 수단이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Nathan Leites, *A study of Bolshevism, Glancee, III* (1953) 참조.

적 학술지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경제학편/력사법학편/어문편),⁶⁾ <철학연구>,⁷⁾ <경제연구>,⁸⁾ <정치법률연구>⁹⁾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저널에 수록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최근 변화된 북한지식인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여성, 세계화, 정보화를 주제로 한 논문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시기별·저널별로 분석대상 논문들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시기별 관련 학술논문 게재 현황

주제범주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
민주주의	-	1	1	3	5	1	-	3	5	5	7	31
인권/여성	4	-	-	-	-	2	2	-	4	2	3	17
세계화	2	-	4	3	3	1	1	2	3	2	-	21
개혁개방	-	1	-	-	-	-	-	1	-	-	-	2
정보화	-	1	-	1	13	13	2	8	5	-	3	46
합	6	3	5	7	21	17	5	14	17	9	13	117

- 6) 『김일성종합대학학보』는 1956년 창간된 가장 권위 있는 북한의 전문학술지이다. 편집체계를 보면, 1958년 7월호부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분리되어 발간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편을 통해 1991년부터는 철학·경제학, 력사·법학, 어문학의 분야로 구분되어 발간되고 있다.
- 7) 『철학연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철학학술지로서 1961년 과학원 산하 철학연구소가 창설된 다음해인 1962년에 창간되었으며 2008년 12월 현재까지 통권 115권이 발간되었다. 주체철학, 정치사상, 조선철학, 세계철학, 논리학, 윤리학, 미학, 종교학 관련 학술논문들에 게재된다.
- 8) 『경제연구』는 경제학분야의 전문 학술잡지로 1956년 창간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겪다가 1986년부터 계간잡지로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통권 141호가 발간되었다.
- 9) 『정치법률연구』는 과학백과사전출판부에서 2003년부터 계간으로 발간되는 정치법률 관련 저널이다.

〈표 2〉 학술지 별 논문 게재 현황

주제범주	『김대학보』 (철학경제학)	『김대학보』 (역사법학)	『김대학보』 (어문편)	『철학연구』	『경제연구』	『정치법률 연구』	합
민주주의	7	6	-	12	-	6	31
인권/여성	5	-	1	4	-	7	17
세계화	3	3	-	-	12	3	21
개혁개방	1	-	-	1	-	-	2
정보화	11	-	-	6	29	-	46
합	27	9	1	23	41	16	117

지금까지 북한의 지식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선험적 분석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북한 지식인에 대한 실증자료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북한 지식인들이 생산해낸 학술담론에 대한 분석은 북한지식인의 가치관과 정치의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북한사회 담론의 생산자이자, 발전전략 수립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며 북한 체제변화의 틀을 만들어가는 지식인들의 역할과 공론화된 정치의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지식인 정책과 지식인의 사회적 성격

북한당국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지식인문제를 혁명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북한의 지식인정책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독재체제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해나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체제의 특징 중 하나인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순응적·동조적 정치문화를 형성해오는데 있어서 기본이 된 문화의 정치적 동원 방식이 바로 북한의 지식인정책에서 출발했다

고 할 수 있다.

국가건설기부터 북한정권은 지식인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선행사회주의체제의 지식인정책과는 다른 관점을 취해왔다. 북한의 지식인관은 지식인을 어느 계급에도 복무할 수 있는 중간계층으로 규정한 마르크스의 지식인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소수특권자’, ‘지배계급의 소부분’, ‘부르주아지의 일부’로 언급한 바 있다.¹⁰⁾ 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계급을 혁명으로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지식인의 선도적 역할을 파악하고 지식인들을 사회주의운동에 적극 참여시킬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기한 지식인문제는 사회주의 운동의 혁명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을 과학적 사회주의의 토대위에 올려 세우기 위한 투쟁에 부르주아 출신의 선진적 지식인들을 참여시키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소련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지도부가 구 지식인들에게 전략적으로 관대했으나 혁명 이후 소련에서는 지식인 집단을 응집적인 사회계층으로 용납해주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 1948년 노동당 창립 당시 김일성정권지도부는 노동자, 농민과 함께 지식인을 혁명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당 마르크제 망치와 낫과 함께 붓을 그려 넣음으로써 지식인을 노동당의 구성성분으로 공식화하였다.¹¹⁾

10)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계급투쟁이 결전에 가까워져가는 시기에는 지배계급의소 부분이 지배계급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혁명적 계급에 가담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듯이 지식인들의 하나의 계급은 아니나 다른 계급에 복무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진 중간계층으로 보았다.

11) 지식인을 혁명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북한의 지식인관은 지식인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에서 출발한다. 먼저 국가건설 초기 북한 김일성 지도부가 지식인을 혁명주체의 한 구성성분으로 규정한 것은 당시 대다수의 지식인

김일성은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반봉건사회’ 지식인의 개혁성과 저항성을 구지식인의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과 함께 지식인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해방 후 지적·문화적 자산의 취약함 속에서 국가건설을 추진해야 했던 김일성지도부의 실용주의적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의 지적 자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북한당국은 국가건설과 전후복구,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지식인 정책은 ‘국가건설기’, ‘전쟁시기’,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기’를 거치면서 변화해 갔다. 권력투쟁을 일단락하고 김일성 유일독재체제의 정당화 담론인 유일사상체계를 사회문화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당국의 지식인 정책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지식인의 사상과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지식인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당국이 내세운 ‘사회주의하에서의 지식인 정책’은 지식인들에 대한 ‘혁명화, 노동계급화’로 그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 방침은 1965년 고등교육성 당총화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7차 전원회의, 제4기 11차 전원회의를 거쳐 1966년 당대표자대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1967년 지식인에 대한 혁명화, 노동계급화 사업은 유일사상체계 구축을 위한 사상분야의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유일사상체계 구축’을 위해 호명되기 시작하던 1967년,

들이 지주출신으로서 착취계급에 봉사했던 것이 사실이나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반제사상과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는 역사인식에 기인한다. 전미영, “김정일시대 북한 지식인정책의 방향,”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한울, 2009), p. 278 참조.

북한 지식인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갑산파 및 중앙당의 사상분야 엘리트들에 대한 숙청을 통해 김일성유 일지도체계의 권력구도가 확정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기 15차 전원 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5·25교시는 ‘반수정주의와의 투쟁’이라는 구호 아래 인텔리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과 문화활동에 대한 총공격이었다는 점에서 5·25교시가 북한 지식인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극심한 것이었다.¹²⁾ ‘죽은 지식인의 사회’에 대한 선포와 다름없었던 5·25교시를 계기로 북한 지식인사회에서 자유로운 지적논쟁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이후 북한지식인은 북한정권의 정당화과정에 동원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당시 <당면한 당사상사업 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5·25교시의 기본정신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전체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었다.¹³⁾ 따라서 1967년 북한의 학계에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과학연구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결부시켜 진행하는 등 당과 로동계급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인테리로서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었다.¹⁴⁾

12) 전미영, 앞의 논문, p. 286.

13)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5·25교시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5·25교시가 어떤 문건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은 당사상사업 부문일꾼들 앞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어서, 이 문건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5·25교시 40주년을 맞은 2007년 5월 25일 『로동신문』은 <5·25교시가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라는 노작임을 밝힌바 있다. 『로동신문』, 2007년 5월 25일자.

당시 해외유학과 지식인들을 비롯해 수정주의의 죄목을 쓴 많은 지식인들이 추출되었다.¹⁵⁾ 그리고 남은 지식인들은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무장해야 하는 사업’에 동원되어야 했다. 당시 지식인들에 대한 혁명화, 로동계급화 사업은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의 지식인계층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25교시를 거치면서 북한 지식인들은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의 이데올로그로서, “당의 열렬한 옹호자, 충실한 방조자, 철저한 관철자”로서 북한의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Ⅲ. 북한체제의 변화 국면과 지식인의 역할

1. 사회주의적 체제개혁과 북한의 변화 국면

일반적으로 체제변화란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과 체제개혁(system reform)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코르나이는 ‘정치영역에서의 다원적 민주주의화, 경제영역에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동’이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본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¹⁶⁾ 코르나이의 견해에 입각해 현대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화는 크게 두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4) 『조선중앙연감』 (1968), p. 184.

15) 당시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개명적 취향’이 있는 사람들 특히 유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축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도서정리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수정주의, 부르주아문화로 분류된 문헌들이 폐기되거나 삭제되었다고 한다. 성혜량, 『등나무 집』 (지식나라, 2000), pp. 312~315.

16)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86~392.

그 하나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들의 경우로, 체제 내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다가 사회주의체제를 완전히 또는 대폭 폐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경우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정치부문과 이데올로기부문에서 급격한 변화와 단절을 통해 새로운 체제로 이행된 경우로 이를 체제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 및 동유럽 26개 국가가 1989년에서 1994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였다.¹⁷⁾ 두 번째 유형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한 사례이다. 이 경우 사회주의의 기본 틀, 특히 정치적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체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7·1경제개선조치 이후의 북한의 변화양상은 정치, 이데올로기부문에 서는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한 채, 경제부분에서 시장화, 분권화를 추구하는 체제 내적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7·1경제개선조치 이후 개혁과정은 국가소유제의 완화,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기업의 자율화와 사회적 자율화 등의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다원주의 요소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의 개혁과정과는 그 개혁의 속도와 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모토로 하여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치분야에서의 체제단속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이중전략은 김정일 지도부의 개혁·개방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혁·개방이 초래하게 될 체제붕괴의 가능성에

17) 이종철,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 이론, 변수, 사례의 도출 및 대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4권 2호 (2010), p. 186.

18) 김근식, “북한의 실리사회주의와 체제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1권 2호, p. 34.

대해 극심한 위기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개방조치가 확대되는 데 비례하여 정치분야에서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통제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이중전략은 체제 내적 개혁의 성공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2006년과 2009년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북미간의 긴장고조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이 차단됨에 따라 만성적인 공극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경제개혁의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제전환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북한당국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북한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변화는 '위로부터의 체제 내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정치방식을 제외하고 경제와 문화의 전 영역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세계경제, 문화체제에 편입한 중국의 경우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정치·문화면에서는 철저히 사회주의를 고수한 채, 경제분야에서만 제한적 개혁조치를 취한 가장 초보적 단계의 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3대 후계자인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권력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하에 경제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한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경제개혁이란 현재 북한정권의 정당성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실리주의적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최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는 근저에는 북한당국이 의도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혁·개방과정에서 시장화와 자유화가 북한당국의 통제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유사한 방식의 체제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권력승계과정에서 발생할 권력엘리트 간의 갈등 및 사회불안정성이 주요 요인으로 자리

하고 있다. 이 요인들은 물론 북한의 체제전환 요인으로 높은 개연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또한 북한당국이 피하고자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시 말해 북한당국은 동유럽의 체제전환을 반면교사로 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취해왔다. 1995년 선군정치 시작은 경제개혁과 체제유지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대응 전략의 일환이었다. 북한당국은 군을 ‘혁명주력군’으로 삼아,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강화, 대내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리더십 강화 및 군대의 친위세력화, 사회적으로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선군문화 확산을 통한 사상통제, 경제적으로는 군대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을 구사해왔던 것이다.

군을 통한 체제 안전판 확보와 함께 북한당국이 동유럽국가의 체제전환의 선례를 피하기 위해 주목한 과업의 하나가 바로 지식인들을 관리 통제하는 문제였다. 특히 김정일은 동구 사회주의체제 전환과정에서 지식인들이 변화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개혁·개방기 지식인의 사상적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인들을 체제수호세력으로 만듦으로써 자본주의사상 유입에 대응하는 문제에 노력을 집중시켰다.

2. 체제변혁기 북한 지식인의 역할과 임무

북한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선도자, 전위자이자 당의 적극적인 사상교양자, 선전자”, “당정책의 관철차, 선전자”로 규정되고 있다. 실제로 주체사상의 이론체계화와 김일성주의로의 전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같은 통치담론의 생산과 전파

는 이러한 북한지식인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국제환경의 변화가 북한체제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던 1990년대 초반, 북한당국은 <조선지식인대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개최된 <조선지식인대회>는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92년 7월 김정일은 1990년대 초반에 형성된 복잡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텔리들의 혁명적 입장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며 전국적 단위의 지식인대회를 개최할 것을 공표하였다.¹⁹⁾ 당시 지식인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기의 지식인의 중요와 이반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온갖 원수들은 이른바 민주주의의 허울좋은 너울을 쓰고 사회주의 나라들에 부르조아자유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이 나라들의 지식인대회를 허물어 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놈들의 그 어떤 책동도 회유와 감언이설도 당과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워나가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습니다.²⁰⁾

1992년 <조선지식인대회>에서는 전환기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임무가 지식인들에게 부여되었다. 그것은 먼저, 지식인들이 “인민들에 대한 선전교양자, 조직동원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사상적 대결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진보에서 지식인들의 결정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¹⁹⁾ 김정일, “혁명적 원칙과 입장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3권 (1998), p. 126.

²⁰⁾ 『지식인들을 당과 사회주의위업에 충직한 투사가 되자(조선지식인대회 보고 1992.12.9)』 (평양: 외국문출판사, 1992), p. 19.

〈조선지식인대회〉 개최 이후 북한 학계에서 일련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 이념을 옹호하고 구사회주의 체제의 수정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단군릉 발굴을 포함하여 민족사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²¹⁾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사회통합 이데올로기의 생산에 지식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조선지식인대회〉가 개최된 지 15년 만인 2007년 11월 30일에 〈전국 지식인대회〉가 개최되었다. 2007년 〈전국지식인대회〉의 개최를 맞아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과학과 기술의 새 시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강국을 하루 빨리 일떠 세우는 데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 나갈 데 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²²⁾고 보도하고 있듯이 이 대회는 개혁·개방기 ‘경제강국’으로의 도약과정에서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인들의 활동을 고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대회에서 각 분야의 지식인들에 대해 구체적인 임무가 부여되었다. 먼저 출판보도문 지식인들은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시대의 선각자, 당의 대변자, 선전자가 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과학자·기술자들에게는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 중요부문 기술공학과 기초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대비약·대변혁을 일으켜나갈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교육부문 지식인들은 새 세기 정보산업시대의

21) 당시 출판 현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불멸의 기치』, 『정치적 다원주의의 반동성, 사회주의가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는 비난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전략의 산물』 등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저서들이 대거 출판되었으며, 또한 『단군의 출생과 활동』, 『고조선의 성립과 수도문제』 등 30여 권의 단군, 고조선 관련 문헌이 출판되었다(『조선중앙연감』, 1994, pp. 196~197 참조).

22) 『조선중앙방송』, 2007년 12월 1일.

요구에 맞게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낼 것이 강조되었으며 문학예술부문 지식인들은 당의 영도업적을 빛낼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나아가야 할 과제가 부여되었다.²³⁾

‘정보화’와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이 핵심 주제로 등장한 2007년 전국지식인대회 개최 이후 북한 학계는 첨단기초과학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제기하였다.²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지식인의 역할 강조는 지식인대회가 개최된 직후에 발표된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다시금 재확인되었다. 2008년 공동사설을 통해 북한당국은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 것”과 함께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 한다”²⁵⁾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술, 교육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2008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가기술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해 “우리는 이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발전된 수준에 올려 세울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북한당국이 지식인들에게 강성대국건설의 주체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진입이라는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집단의 지적자산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환기 체제 이반세력이 될 수 있는 지식인집단을 체제의 옹호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응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23) 『로동신문』, 2007년 12월 1일.

24) 『조선신보』, 2008년 1월 31일.

25) 『로동신문』, 2008년 1월 1일.

Ⅶ. 북한지식인의 정치의식

1. 세계화 인식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어디에 두어지든 간에 20세기 말에 등장한 세계화 담론은 전지구적인 현상이자 현시대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화란 20세기 말의 체제전환과 정보화라는 기술진보의 현상을 매개로 하여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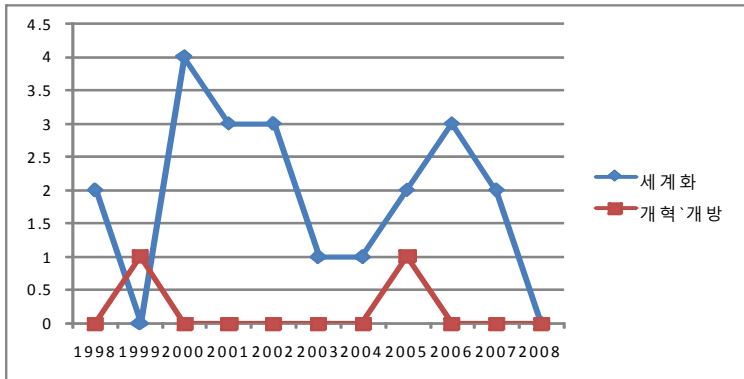
북한의 학술지에서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으며²⁷⁾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8년부터로, ‘세계의 일체화론’, ‘세계경제의 일체화’, ‘경제의 일체화’, ‘세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북한 지식인들이 인식하

26) 세계화에 대한 담론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특히 세계화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논의 중 하나로서 “세계화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논쟁들에 대한 지리의 제약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사람들끼리는 점차 상호적으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해된다(M. Waters, *Globalization,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1995, p. 5 참조). 또한 세계화는 “뚜렷한 사회·정치적 제도들의 기반을 뒤흔들면서 모든 문화적 다양성을 일소해 보릴 정도로 위협을 가하는 획일성의 범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Blackwell, 1990, p. 240 참조).

27) 처음 북한학술지에 ‘세계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95년 〈‘세계화 구상’은 남조선 경제를 영원한 식민지 예측경제로 만들려는 매국 배족적 망상〉, 〈남조선의 세계화는 망국의 길이다〉는 논문을 통해서였다. 논문의 제목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듯이 이 시기에는 주로 당시 남한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손종철, “세계화 구상은 남조선 경제를 영원한 식민지 예측경제로 만들려는 매국 배족적 망상,” 『경제연구』, 89권 4호, 1995; 본사기자, “남조선의 세계화는 망국의 길이다,” 『조선사회민주당』, 2호, 1995 참조.

고 있는 세계화란 개별 국가와 민족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와 경제적
예속, 개별민족국가의 정치적 주권의 부정,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요, 미국식 자본주의 문화 확산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1〉 '세계화'에 관한 학술지 게재 빈도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학계에서의 세계화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증하고 있다. 주요 논문들을 보면,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이 설교하는 경제의 세계화의 반동적 본질”,²⁸⁾ “제국주의자들
이 떠벌이는 세계의 일체화 흐름의 반동성”,²⁹⁾ “미제의 세계화책동의 반
동적 본질”,³⁰⁾ “미제에 의한 세계경제 일체화의 반동적 본질”,³¹⁾ “세계화
와 그 경제적 후과”³²⁾ 등 주로 경제적 세계화를 중심으로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되어 있다.

28) 박상철, 『김일성대학학보, 철학경제학편』, 461권 2호 (2000).

29) 로승일, 『김일성대학학보, 철학경제학편』, 46권 4호 (2000).

30) 최철용, 『정치법률연구』, 제3호 (2005).

31) 리철성, 『경제연구』, 제2호 (2000).

32) 리근환, 『경제연구』, 제3호 (2002).

‘세계화’에 대한 북한 학계의 기본 인식은 “사회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상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수립하는 것”³³⁾으로 보고 있다. 먼저 ‘경제의 세계화’란 “제국주의적 다국적기업들이 경제시장을 지배하여 그 예속을 위한 현대판 신식민주의적 약탈의 기본전략”으로 평가하며 경제의 세계화에 의하여 “다국적 기업에 의한 지역경제의 지배와 예속은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³⁴⁾고 인식한다. 특히 경제를 세계화한다는 것은 “국내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생산과 무역, 금융 등 모든 경제활동에 대하여 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제의 세계화에 의한 자유화의 실시는 “결국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말아먹는” 조치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화의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세계화가 개별 국가의 정치적 주권을 부정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권의 원조도 “〈세계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하고 있다”³⁵⁾고 비판한다.

〈세계화〉의 간판 밑에 주권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상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서방의 대대적인 침투와 간섭이 감행되고 있다.³⁶⁾

세계화란 “모든 민족국가들의 국경과 매개 나라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다 없애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통합된 하나의 전일체를 형성”하며,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33) 최철웅, “미제의 세계화책동의 반동적 본질,” 『정치법률연구』, 3호 (2005), p. 46.

34) 리근환, “세계화와 그 경제적 효과,” 『경제연구』, 3호 (2002), p. 54.

35) 장인백,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의 세계화책동을 짓부시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1호 (2001), p. 37.

36) 최철웅, 앞의 논문, p. 46.

해당 나라와 민족의 내부문제들에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는 국제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³⁷⁾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화론이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리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세계화는 개혁·개방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에서 ‘개혁·개방’은 곧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즉 개혁·개방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가 사회주의를 변질시켜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개방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두 편에 불과하다.³⁸⁾ 북한에서 보는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은 엄밀히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보통명사로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소위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개방〉 책동”에 관한 것이다. 전자에 대한 언급, 즉 보통명사로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간헐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1998년 5월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37) 박상철,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이 설교하는 경제의 세계화론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46권 2호 (2000), p. 73.

38)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매우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데에 비해 개혁, 개방에 관한 언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세계화담론에 비해 개혁·개방론이 더 불편한 테마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화란 현시대 보편적인 현상이자, 세계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테마로서, 역시 대항담론으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반세계화 담론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개혁·개방론은 현재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요구되고 있는 압력이자, 또한 개혁, 개방 그 자체를 부정할 수만은 없는 논리적 어려움 또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늘 북한에서 개혁, 개방에 대한 논의는 “소위 〈개혁〉, 〈개방〉 책동”으로 지칭되고 있다.

책임일군과의 담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혁 개방 압력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새조국 새사회를 건설하면서 어느 한 분야도 개혁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나라의 문을 닫아 맨 적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개혁이란 낡은 것을 개조하고 혁신하는 과정이며 가장 철저한 개혁은 다른 아닌 사회적 변혁, 사회혁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개방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개방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³⁹⁾ 이러한 입장은 이후 북한 학계의 개혁 개방에 관한 일반적 입장으로 자리잡아왔다.

즉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개혁과 개방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의 요구, 즉 ‘개혁, 개방 책동’은 “혁명적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제 놈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지배권을 안에 넣자는 목적”하에 행해지는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파렴치한 내정간섭”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⁴⁰⁾ 특히 북한 학계가 우려하는 ‘개혁, 개방 책동’의 핵심은 ‘다원주의’, ‘다당제’, ‘자유화’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있다.

2. 민주주의 인식

북한을 포함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도 예외 없이 ‘민주주의’를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여왔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와 사회

39)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조국』, 2004년 12월호, www.NKchosun.com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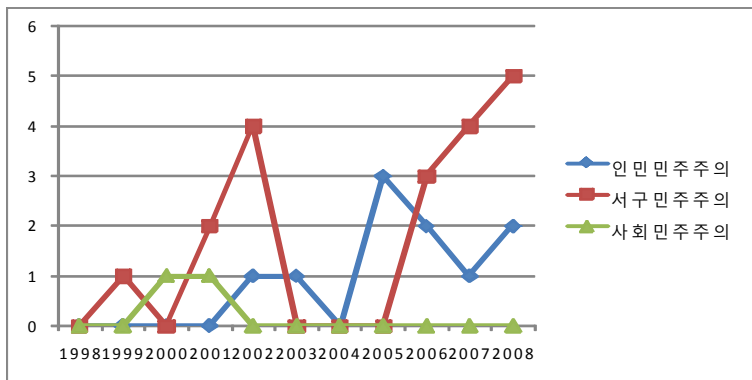
40) 허철수,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개방〉 책동의 반동적 본질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1권 2호 (2005), p. 28.

주의 두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민주주의의 사전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여 근로인민대중에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다.⁴¹⁾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말하고 있듯이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민주주의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며 이는 현대사회에 보편적 가치로 통용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별개의 개념인 것이다.

〈그림 2〉 민주주의에 관한 학술지 게재 빈도



41) 『조선말대사전』, 1권 (1992), p. 1232.

북한 학계는 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민주주의가 일반적 원리나 보편적 가치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형태, 국가의 한 변종이라는 레닌주의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와 레닌에게 있어서 국가란 계급의 지배 도구이므로 민주주의가 국가의 한 형태인 한, 민주주의는 계급지배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계급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 일반’이라든가 ‘순수 민주주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계급적 민주주의만 있게 된다고 보았다.⁴²⁾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기간 동안 북한 학술지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논문게재 빈도를 살펴보면, 서구민주주의에 관한 논문이 19편, 동유럽사회민주주의에 관한 논문이 2편,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논문이 10편을 차지하고 있다. 즉 비판의 대상인 서구민주주의와 동유럽사회민주주의에 관한 논문이 6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서구민주주의의 유입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민주주의’로 명명하며 소수의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체제로 평가하고 있다. 즉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로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소수자본가계급을 위한 민주주의, 가짜민주주의라는 것이다.⁴³⁾

북한 학계의 이러한 입장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서구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북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 기원에서 볼 때 민주주의란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

42) 박정호, “레닌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재검토”, 『시대와 철학』, Vol.2 No.1 (1991), p. 38.

43) 김영수,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반인민적 본질”, 『철학연구』, 2002년 2호, p. 44.

어서 민중이 직접 참가하는 ‘다수의 지배’와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보편타당한 필연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⁴⁴⁾

특히 2차 대전 이후 서구의 결합방식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식이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식민주주의가 하나의 신앙과도 같이 되었으나,⁴⁵⁾ 미국식 민주주의는 “극소수 미국 대독점자본가들의 탐욕적 이익실현에 복무하는 반인민적 민주주의”라는 주장이다. 즉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보편적 원리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 주권분립, 대의제 등은 ‘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권력이 대독점자본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⁴⁶⁾

북한의 학술지에서 ‘우리식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2006년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까지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되던 북한식 민주주의에 대한 용어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담론을 통해 사회주의 고수를 천명한 바 있다. 당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권의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서 주체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며 ‘우리식 사회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⁴⁷⁾

44) 진유현,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독재정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편)』, 53권 1호 (2007), pp. 101~102.

45) 김영수, 앞의 논문, p. 23.

46) 로승일,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인민적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정치경제편)』, 52권 2호 (2006), pp. 22~23.

47)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민주주의’의 내용은 과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의 주체를 ‘프롤레타리아트’에서 ‘인민대중’으로, 이념적 기반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대체한 채, ‘주체’의 언어로 재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 최근 들어 ‘우리식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서구민주주의와 차별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은 개혁·개방의 압력과 서구민주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날 소련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고르바초프가 내걸었던 개혁의 기치 중 하나가 ‘인간적·민주주의적 사회주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등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형식적 원칙들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등장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이상으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민주주의’이다.⁴⁸⁾ 북한 학계에서 현대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민주주의가 현실사회주의체제의 자체 결함에 대한 반성적 비판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현실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은 사회주의 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한 공격으로 작용해 왔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전체주의적 속성, 사회제도적 비민주성, 경제체제의 비자율성 등 사회주의 체제의 약점에 대한 공격은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정당성의 근거로 거론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북한 학계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민주주의가 인민대중을 참다운 정치의 주인,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운”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주권행사의 방식으로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거는 국가 또는 정당,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지도기관들을 임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의 의사에

48) 북한 학계에서는 동유럽 사회민주주의를 19세기 베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인 ‘현대사회민주주의’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사회민주주의’는 그 메시지가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로의 복귀’라는 면에서 ‘자본주의의 유지’를 추구했던 지난날의 사회민주주의와는 구별된다.

따라 선출한다는 점에서 주권재민의 정치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⁴⁹⁾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비롯한 각급인민회의의 대의원 선출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권분립, 대의제, 다당제 등 근대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제도에 대한 북한 학계의 인식은 “부르주아 대독점 재벌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부르주아 의회제와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사회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부르주아의회제와 <다당제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은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파괴하는데 작용한다.⁵¹⁾

이와 함께 가장 바람직한 정치방식으로서 당의 영도적 역할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은 모든 생활이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전체인민이 공통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투쟁해나가는 집단주의사회⁵²⁾인 까닭에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집권당과 정권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9) 리명일,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적 선거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우월한 선거제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편)』, 44권 2호 (1998), p. 46.

50) 강남수, “부르주아의회제의 반동성,” 『철학연구』, 4호 (2001), pp. 43~44 ; 로승일,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인민적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53권 2호 (2006) p.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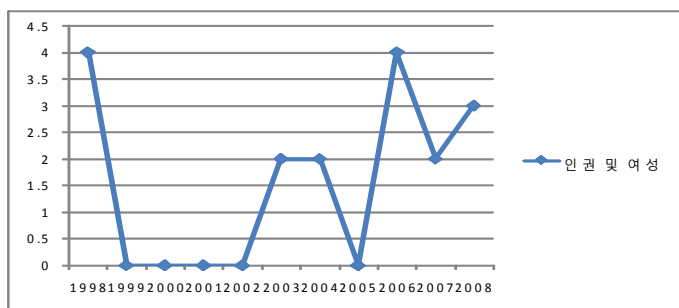
51) 김영수,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회주의를 좌절시키는 요인,” 『철학연구』, 1호 (1999), p. 34.

52) 정만호, “사회주의 정치방식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 제기되는 중요한 역사적 과제,” 『철학연구』, 3호 (2004), p. 20.

3. 인권 및 여성문제 인식

북한 학계에서 인권에 관한 언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에 관한 논문의 경우, 1998년과 2000년대 중후반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시기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으나, 인권문제에 관한 북한 학계의 기본 입장을 보기 위해 1998년 이전의 인권관련 학술논문의 게재 여부를 보면, 주요 학술지인 『김일성종합대학학보』와 『철학연구』에 인권에 관한 주제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였으며 각 시기 별로 보면, 1992년 1회, 1993년 1회, 1994년 1회, 1995년 4회, 1997년 2회 게재되고 있다.

<그림 3> 인권 및 여성문제에 관한 학술지 게재 빈도



북한 학계에서 인권문제가 논의된 시기가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개선 요구가 제기된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은 북한 자체의 인권논의가 외부의 인권압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⁵³⁾ 북한의 인권

⁵³⁾ 북한 학계에서 인권문제가 등장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개선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92년 44회부터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문

문제의 제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공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한 인권상황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보편적 인권관과는 다른 사회주의체제 북한의 인권관이 자리 잡고 있다.

주체사상의 기본개념을 차용하여, 북한에서 인권이란 “사람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로 개념화 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주권에 평등하게 참가할 권리,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능력과 소질에 따라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병치료를 받을 권리, 배움에 대한 권리,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 등 사회정치생활과 경제생활, 문화생활에서의 자주적 권리들”⁵⁴⁾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관은 기존 사회주의 인권관을 따르고 있다. 사회주의 인권관은 서구 자본주의 인권관과는 다른 본질적인 차이에서 출발한다. 먼저 인권의 연원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들 수 있겠는데, 인간의 갖는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로 보고 있는 서구자본주의의 인권개념과는 달리, 사회주의 인권관은 인권의 진정한 해방이란 모든 계급의 억압과 박탈, 착취가 해소된 상황에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계급적 억압이 해소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진정한 인권이 수호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서구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인간의 자유권에 기반을 둔 ‘시민 및

제가 제기된 이후 매년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인권소위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등장했다.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됐고, 2004년에는 미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졌다.

⁵⁴⁾ 양성철, “부르조아인권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44권 4호 (1998), p. 37.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를 가장 중요한 권리로 보는데 비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우선적으로 주장해왔다. 마지막으로 인권의 우선적 주체가 개별적 개체인가, 집단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강한 자유주의적 전통에 따라 인권의 우선적 주체는 개별적 개인이며, 이는 국가나 정부 등 상위 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집단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국가 또는 집단 속에서 개인은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하며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⁵⁵⁾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개념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받을 권리, 즉 노동참여의 권리, 무상치료의 권리, 무료의무교육의 권리 등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국한되어 있을 뿐, 인권에서 가장 기본적 권리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물론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라는 항목을 통해 정치적 자유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정치조직에 참가해야할 의무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한편 이러한 입장은 '자유'에 대한 '주체적 이해', 즉 집단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에 우선하는 북한식 자유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자유는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는 한마디로 말하여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는 생활을 마음껏 하는 것이라는데 있다. (중략) 참다운 자유는 자기 운명을 사회적집단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사회적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집단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데 있다.⁵⁶⁾

55) 최지영, "주권과 인권: 인권담론을 통해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연구," 『중소연구』 통권 104호 (2004/2005), pp. 76-79 참조.

56) 박광선, "자유와 본질," 『철학연구』, 1호 (1998), p. 47.

북한 학계의 인권관의 또 다른 특성은 생존권을 인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생존권은 인권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사람은 사회적 권리를 비롯한 다른 모든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생존권 문제가 무엇보다 앞서 토의되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들에서도 그에 대하여 명백히 규제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이때 생존권은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집단의 생존권을 의미하며 개인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집단의 생존 속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보다는 집단의 인권을 우위에 두는 집단주의적 인권관으로 귀결된다. 북한의 경우 근대국가의 수립과정에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즉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주권이 집단적 인권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북한에서 여성문제의 인식은 사회주의적 여성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남녀불평등의 근원을 사적 소유의 시작에서 찾고 있다. 즉 사적소유가 없었고 착취와 억압이 없었던 원시공동체사회에서는 남녀불평등도 없었으며 여성문제도 없었다는 주장이다.⁵⁸⁾ 사적소유에 기초한 계급사회의 발생이 남녀불평등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소위 부르주아 이론에 대한 반박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문

57) 엄성남, “미국은 다른 나라 인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인권범죄국가,” 『정치법률연구』, 4호 (2006), p. 41.

58) 박혜숙,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녀성문제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49권 1호 (2003), p. 21.

제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가정생활간의 갈등문제에 관한 것이다. 먼저, 북한 학계에서는 생물학적 문제로 정당화되던 여성차별문제를 비판하며 남녀 성별의 차이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는데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본다. 즉 여성의 사회적 역할문제는 인간의 사회적 속성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⁵⁹⁾

두 번째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모성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절대화하는 신프로이드 이론가들의 주장⁶⁰⁾을 반박하며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생활을 하면 여성들 자신이 혁명화되어 가정이 더욱더 건전해지고 가정혁명을 다그칠 수 있으며 사회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⁶¹⁾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는 남녀간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불평등성이 내재되어 있다. 즉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영유아의 사회적 보육이 여성노동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통적 사회주의 여성관의 정당성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 여성의 실질적 지위를 개선하기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4. 정보화 인식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북한 지식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며 정보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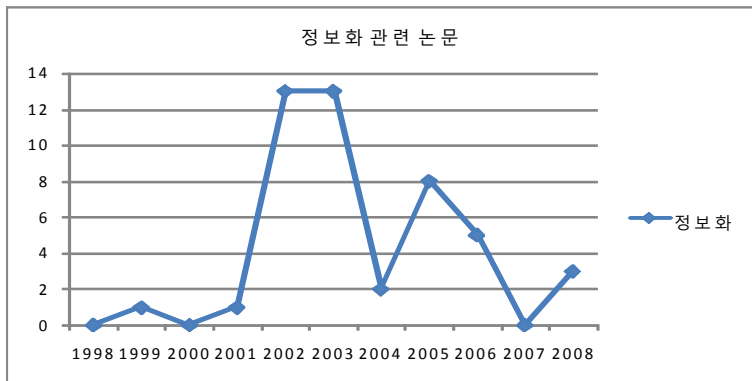
59) 박혜숙, “사회발전에서 여성이 노는 역할을 부인하는 현대부르조아이론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3호 (2004), p. 39.

60) 신프로이드주의론에 따르면 자기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사회기관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기형아, 심리적 저능아로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직업활동은 청소년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61) 박혜숙, 앞의 논문, p. 41.

앞의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북한의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정보화에 관한 논문의 비중은 정보화에 관한 북한 학계의 관심을 대변해준다. 특히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2002년부터 북한 학계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개혁 과정에서 정보화에 대한 관심 증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4> 정보화에 관한 학술지 게재 빈도



정보화에 대한 북한 학계의 기본인식은 정보화란 거스를 수 없는 21세기적 현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20세기가 기계제 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김정일의 언급이 자주 인용되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산업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정보기술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어 정보산업의 조직화, 과학화 수준에 의하여 사회경제발전이 좌우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시기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강성대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현 시기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담보로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정보산업의 빠른 발전은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한다.⁶²⁾

특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산업의 발전이 보다 중요하데, 그 이유는 세계과학기술발전 추세를 제때에 파악해야만 그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과학기술전반의 발전의 주된 요인으로서, 현 시대는 누가 가치 있는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따라 인간의 실천능력이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즉 과거에는 과학기술연구 환경이 ‘폐쇄’되어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제한성이 극복되고 컴퓨터망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교류가 많아지고 정보자료들을 광범히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⁶³⁾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해외와의 과학기술분야와의 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보화시대에는 근로자들의 노동활동이 이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즉 정보화시대에는 사회적 부가 지능노동에 의하여 창조되며, 따라서 정보산업시대의 노동력재생산에서는 정신적 능력, 지적 능력의 재생산이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⁶⁴⁾ 이와 함께 정보기술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보산업시대에 와서는 최신과학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정보기술 인재양성 사업에 힘을 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

62) 김상학, “정보산업의 발전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경제연구』, 2호 (2002), p. 19.

63) 김영민, “정보과학기술은 인간의 창조적능력을 증대시키는 힘있는 추동력,” 『철학연구』, 4호 (2005), p. 31.

64) 김정철, “정보산업시대의 노동력 재생산의 특징,” 『경제연구』, 4호 (2002), p. 19.

다. 정보산업은 고도의 지능을 소유한 수재형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요구하므로 컴퓨터 수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⁶⁵⁾

현재 북한은 정보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각 주요대학에 컴퓨터학과 및 컴퓨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컴퓨터교육을 교육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대세우고 있다. 정보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과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지식인들은 자유화, 민주화, 다원화를 요구하며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지식인들에게서 과거 동유럽 지식인들에게서 발견되었던 그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물론 현재 북한사회가 그 어떤 반대도 허용될 수 없는, 최소한의 자율성의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철저히 통제적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사회에서 지식인이란 지난 6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체제이념의 이데올로그이자 당의 ‘열렬한 옹호자’, ‘충실한 방조자’로서 구조화되어 왔으며, 체제수호세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집단이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북한지도부가 선택한 지식인문제 해결의 방식은 지식인의 계급적 성격을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혁명주체 세력으로 그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이후 북한의 지식인집단은

⁶⁵⁾ 김정철, “정보산업시대의 로동력 재생산의 특징,” 『경제연구』, 4호 (2002), p. 21.

당내 지식엘리트로서 당지도부와의 운명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북한지식인이 갖는 존재구속성으로 인해 북한의 지식인집단이 체제전복을 전제로 한 반체제 개혁세력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현재 북한사회의 변화국면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무의미하다거나 전적으로 도구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북한지식인집단이 체제내적 개혁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제전환기 민주화·자유화를 선도하고 의식개혁을 주도했던 동유럽 지식인들과는 차원을 달리하지만, 북한의 지식인들 역시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우선적 과제로 한 체제내적 개혁을 수행해나가는데 주력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체제변혁기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경제성장과 ‘김일성사회주의체제’의 유지라는 양대 목표를 성취해나가기 위해 북한 지식인은 자본주의 문화침투에 대응해야할 체제의 이데올로기로서,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할 선진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북한의 지식인은 체제 전복세력이 아닌, 사회변화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개혁을 추동해가는 친(親)체제적 개혁세력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가는 세계사적 변화 국면은 북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북한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 지식인들이 생산해 낸 지난 10년간의 학술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체제유지와 국가발전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북한지식인들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경제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

한 경제적 세계화는 정치, 문화, 사회 등 제반영역에서의 범지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가 개별 민족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들의 발전수준, 정치구조, 역사문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서 각국의 세계화 전략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체제경쟁력을 상실한 북한에게 있어서 경제적 세계화는 ‘독점자본의 예속’으로 인식되며, 민주화, 자유화, 다원화 등 서구정치방식을 보편화하고 있는 정치적 세계화는 김일성사회주의체제의 전통적인 주권방식, 정부체제 및 정치과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서구자본주의 문화의 보편화로 귀결되는 문화의 세계화는 북한의 체제이념과 사유방식에 대한 문화전복의 기폭제로 인식된다.

세계화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철저히 세계화 거부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전면적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체제내적 개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도 세계화와 개혁·개방으로 야기될 체제전환을 피하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북한사회에서 반세계화 전략은 정치, 문화면에서 집중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민주, 자유화, 인권 등 서구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하여 ‘우리식 민주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적 인권’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민족주의와 민족문화의 강조는 반세계화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를 수용한 많은 국가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세계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담론의 역할을 수행해왔듯이 개혁·개방과 세계화에 끊임 없이 저항해온 북한에서 세계화의 파고는 북한 내부에서의 민족주의의 과잉현상을 초래했다. 1990년대 민족주의에 대한 재해석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후 사회주의 이념의 공백을 대체할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 민속전통과 민족문화 복원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민족주의는 세계화의 물결에 대응하

기 위한 저항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학계의 이러한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발전전략의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시장경제의 도입, 실리사회주의 등 경제분야에서의 개혁적 조치와는 달리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는 ‘주체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현재 북한사회에서 반세계화 담론이 체제수호의 이데올로기로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북한사회도 세계화를 전격적으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 오히려 정치적 영향이 적은 분야에서 이미 세계화의 환경에 일정부분 참여해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정보화의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북학학계에서 발표된 관련 주제 중 정보화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발표되었으며, 특히 경제개혁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던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정보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정보, 지식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정보산업의 발전이 세계화를 촉진시킨 매개체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북한지식인의 정보화 인식은 북한체제변화의 관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북한지식인들의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선진국의 첨단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실용주의적 입장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화의 확산은 과학기술의 교류뿐만 아니라 외부문화가 유입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통로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접수: 2011년 4월 29일 / 수정: 2011년 5월 21일 / 게재확정: 2011년 6월 7일

【참고문헌】

- 강남수. “부르조아회계의 반동성.” 『철학연구』, 4호, 2001.
- 김근식. “북한의 실리사회주의와 체제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1권 2호, 2007.
- 김상학. “정보산업의 발전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경제연구』, 2호, 2002.
- 김영수.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회주의를 좌절시키는 요인.” 『철학연구』, 1호, 1999.
- 김영수.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반인민적 본질.” 『철학연구』, 2호, 2002.
- 김완선.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소동의 반동성.” 『정치법률연구』, 3호, 2006.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성집』, 13권, 1998.
- . “혁명적 원칙과 입장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3권, 1998.
- 김정철. “정보산업시대의 노동력 재생산의 특징.” 『경제연구』, 4호, 2002.
- 김영민. “정보과학기술은 인간의 창조적능력을 증대시키는 힘있는 추동력.” 『철학연구』, 4호, 2005.
- 리근환. “세계화와 그 경제적 후과.” 『경제연구』, 3호, 2002.
- 로승일.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인민적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53권 2호, 2006.
- 리금숙. “우리나라에서 녀성들이 사회에 널리 진출할 수 있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3호, 2004.
- 박광선. “자유와 본질.” 『철학연구』, 1호, 1998.
- 박상철.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이 설교하는 경제의 세계화론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대학교학보(철학경제학편)』, 46권 2호, 2000.
- 박정호. “레닌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재검토.” 『시대와 철학』, 2권 1호, 1991.
- 박혜숙.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녀성문제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49권 1호, 2003.
- . “사회발전에서 녀성이 노는 역할을 부인하는 현대부르조아이론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3호, 2004.
- 손종철. “세계화 구상은 남조선 경제를 영원한 식민지 연속경제로 만들려는 매국 배족적 망상.” 『경제연구』, 89권, 4호, 1995.
- 양성철. “부르조아인권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44권 4호, 1988.

- 엄구호. “후기공산주의 러시아인의 정치의식: 전통주의와 자유주의.” 『중소연구』, 통권 95호, 2002.
- 엄성남. “미국은 다른 나라 인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인권범죄국가.” 『정치법률연구』, 4호, 2006.
- 외국문출판사 편. 『지식인들은 당과 사회주의위업에 충직한 투사가 되자(조선지식인대회 보고 1992.12.9)』. 평양: 외국문출판사, 1992.
- 이종철.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 이론, 변수, 사례의 도출 및 대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4권 2호, 2010.
- 장인백.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의 세계화책동을 짓부시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2001년 1호.
- 전미영. “김정일 시대 북한의 지식인정책.”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한울, 2009.
- 전하철. “현대사회민주주의의 반동적 본질.” 『철학연구』, 4호, 2000.
- . “현대사회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그 반동성.” 『철학연구』, 1호, 2001.
- 정만호. “사회주의 정치방식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제기되는 중요한 역사적 과제.” 『철학연구』, 3호, 2004.
- 조성근. “인권의 본질.” 『철학연구』, 3호, 1998.
- 조영남. “정보산업발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차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49권 1호, 2003.
- 조선사회민주당. “남조선의 세계화는 망국의 길이다.” 『조선사회민주당』, 2호, 1995.
- 주창일. “우리식 민주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 52권 2호, 2006.
- 진유현.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독재정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53권 1호, 2007.
- 최정심. “공화국법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법.” 『정치법률연구』, 3호, 2006.
- 최지영. “주권과 인권: 인권담론을 통해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연구.” 『중소연구』 통권 104호, 2004/2005.
- 최철용. “미제의 세계화책동의 반동적 본질.” 『정치법률연구』, 3호, 2005.
- 현용삼.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주요기능.” 『정치법률연구』, 4호, 2005.
- A. W. Gouldner, *Against fragmentation; The origins of Marxism and the sociology of*

- intellectua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D. Kavanagh, 정재욱 역. 『정치문화론』, 서울: 도서출판 이진, 1989.
-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Blackwell, 1990.
- Edward Shils, "the Intellectuals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New States," *World Politics*, Vol.12, No.3, 1960.
-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Radhika Desai, *The Intellectuals and Socialism*, London: Lawrence & Wishart, 1994
- Robert D. *English, Russia and the Idea of the West: Gorbachev, Intellectuals & The End of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 M. Waters, *Globalization,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1995.
-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8.
-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85.
- 『로동신문』. 2007.3.3/ 2007.5.25/ 2007.12.1/ 2008.1.1.
- 『조선신보』. 2008.1.31.
- 『조선중앙방송』. 2007.12.1.

Abstract

The Role of Intellectuals and Political Consciousness
in North Korea

Jeon, Mi-Yeong(Dongguk University)

North Korean intellectuals play a central role in economic reforms, precisely speaking pro-government reforms, although their job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tellectuals in Eastern Europe who led the transition to capitalism. North Korean intellectuals are performing the role of the ideologues who ward off Western cultures and reformers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y in globalization. Deviating from the socialist conception of intellectuals, North Korean intellectuals have the status of revolution subjects like proletariats. Based on the class theory,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s mobilized intellectuals to process of "revolution and construction," Kim Jong-il. North Korea's current supreme leader, launched restricted reform policy to make a powerful and prosperous country. North Korean government recently mobilized intellectuals to reform the economic sector and counteract the ideological agitation caused by reforms and open policy. The global phenomenon of constructing the industry structure with focus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going to strengthen the role of intellectuals, while feeding North Korea's concern that the high-tech information industry would promote the status of the intellectuals.

KeyWords: North Korea, Intellectuals, Political Consciousness, Globalization, Reform and Opening Policy.

전미영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김일성의 말, 그대중설득의 전략』(책세상, 2001), 『김정일정권의 정세인식: 선군담론분석을 중심으로』(통일연구원, 2006),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2』(공저), 한울, 2007), 『북한의 학문세계』(공저) 선인, 2009), “북한에서의 남한연구 현황과 특징”(『사회과학연구』, 18집 2호, 2010).